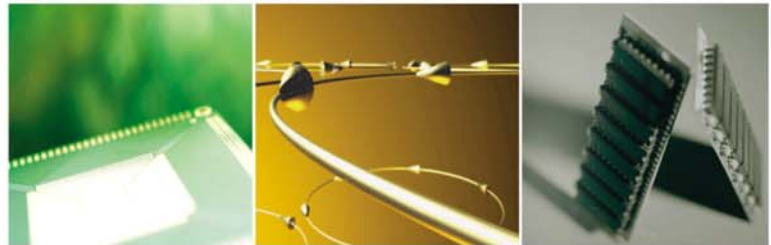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주요 이슈 및 전망

남상열 · 김욱준 · 정은희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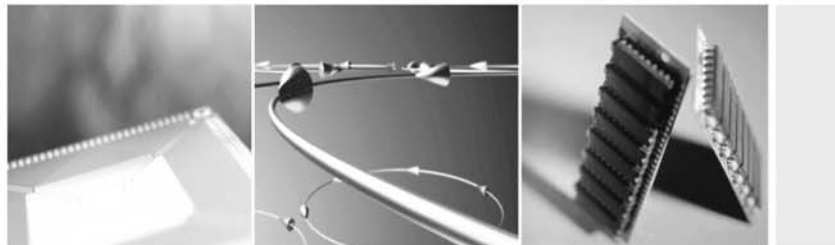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주요 이슈 및 전망

2008. 9. 1

남상열 · 김육준 · 정은희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 I | 서론
- II | 개막회의
- III | 라운드테이블
- IV | 전문가 패널
- V | 이해관계자 포럼
- VI | 평가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남 상 열

- synam@kisdi.re.kr, 02-570-4370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석사
-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WTO TBT 위원회 위원, 한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선임위원, 대외경제전문가포럼(KOPIE) APEC 경제기술협력(ECOTECH)분과 위원
- 저서: “무역상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책연구 05-03), 2005. 9.
“Aid for Trade 분야의 논의동향과 한국의 지원확대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
“한-EU FTA가 우리나라 기술표준제도의 선진화와 투명화에 미치는 영향”, KISDI(수탁 07-31), 2007. 12.
‘Implications of Liberalizing Korea-U.S. Trade in the Automobile Sector: Potential Impact of the Korea-U.S. FTA’, KEI Seminar on Auto Provisions of KORUS FTA, 2008. 2.

김 옥 준

- wkim@kisdi.re.kr, 02-570-4139
-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학사
- 미국 Syracuse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 미국 Syracuse 대학교 정보통신정책 박사과정수료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PII협력센터 주임연구원
- 저서: “OECD 주요 이슈 분석 및 전략 연구”, KISDI(수탁 07-43), 2007. 12.
“OECD 정보사회지표작업반 의제 분화에 관한 탐색적 조사 연구”, KISDI 정책초점 제20권 11호, 2008. 6.

정 은 희

- ehjeong@kisdi.re.kr, 02-570-4215
-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 중앙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 前 한국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협력센터 연구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PII협력센터 연구원
- 저서: “OECD 주요 이슈 분석 및 전략 연구”, KISDI(수탁 07-43), 2007. 12.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주요 논의 동향”, KISDI 정책동향 제20권 4호, 2008. 3.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의 만남: OECD 그린 IT 주요 논의 내용 동향”, KISDI 정책동향 제20권 11호, 2008. 5.
“OECD 장관회의를 통해 바라본 인터넷 경제의 미래”, KISDI 정책초점 제20권 15호, 2008. 8.
“융합미디어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경제의 미래”, 통신연합, 2008. 8.

◆ 본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는 각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기업, 학계, 시민사회, 인터넷 기술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장관회의 개막 전날인 2008년 6월 16일 개최된 이해관계자 포럼과 17~18 양일간 개최된 장관회의 개막회의, 라운드 테이블 및 전문가 패널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사실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 한국방송통신위원장, 앙헬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비디오 메시지를 보내온 반기문 UN 사무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은 연설을 통해서 인터넷환경의 신뢰문제, 인터넷이 소비자 혹은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구촌 공동의 문제와 국제 공조를 강조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 혹은 사용자는 수동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좀 더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생산 및 유포하게 되었다. 본 장관회의의 모든 참석자들은 오늘날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나아가 인터넷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비정부간 공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틀 동안 개최된 라운드 테이블은 본 장관회의의 최종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주요 의제들의 토론의 장이었다. 라운드 테이블의 결과는 각국 정부 대표들에게 보고되어 서울선언문의 승인절차로 이어졌다. ‘경제성과 및 사회복지 향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인터넷 경제가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진단하였다. 사회 전반의 인프라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인터넷 기술을 살펴보고 전자정부, 에너지 효율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도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라운드 테이블 ‘융합의 혜택’은 융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융합이 가져

다주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정보통신정책을 구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투자 및 경쟁을 활성화하고 IPv6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정책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술·제도·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특히 융합에 대한 여러 나라의 관점이 그리스, 멕시코, 스페인, 이집트의 발표를 통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개진되었다.

세 번째 라운드 테이블인 ‘창의성 증진’에서 참가자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창의와 혁신의 이해 및 가치 공유를 통해 인터넷 환경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인터넷이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접근성이 창의성 발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활용 능력(ability), 비용 지불 능력(affordability), 그리고 활용과 적용을 희망하는 사회적 준비(social readiness)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네 번째 라운드 테이블인 ‘신뢰의 구축’에서는 인터넷 발달의 기저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이며, 특히 인터넷 시대의 소비자의 권익은 이러한 신뢰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는 그 동안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듯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보보호 및 보안이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기를 촉구하는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게 다루어 졌다.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인 ‘글로벌 인터넷 경제’에서는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기회를 향후 수십억 사용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인프라 확충은 물론 표현의 자유, 콘텐츠의 접근도 인터넷 경제의 글로벌화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동시에 개최된 전문가 패널은 인터넷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과 인터넷 상의 정보보호 및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의견이 교환이 되었다.

이해관계자 포럼은 비즈니스, 인터넷 기술 전문가, 시민사회 및 노동계로 구성되었다. 기업들

이 참여한 비즈니스 포럼은 네트워크, 정보통신 기기, 콘텐츠 사업자 등은 창의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전 성명을 채택, 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 인터넷 기술 전문가 포럼은 인터넷 발전의 핵심 원리로 단대단(end-to-end) 및 밑으로부터의 협업의 원리를 제시했으며 인터넷 주소와 같은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민사회·노동계 포럼은 인터넷이 결국 소비자와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기술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술결정주의를 지양함과 동시에 문화적 다양성 및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I. 서 론

1. 개 요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개요

- 기간: 2008년 6월 17일~18일
- 장소: 서울 코엑스
- 주제: 미래 경제성과와 사회복지 향상, 융합에 따른 혜택, 창의성 증진, 신뢰 구축 및 글로벌 인터넷 경제
- 주요 행사
 - 개막식 및 개막회의
 - 라운드 테이블
 - 전문가 패널 및 정부수석대표회의
 - 폐막식

□ 장관회의 개최 배경

- 1998년 캐나다 오타와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개최
 - 인터넷시대 도래의 초기단계였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관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 기반으로 떠오르는 인터넷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이슈를 논의하였으며, 인터넷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정부 외에 기업, 소비자관련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인 첫 번째 국제회의였음
- 통신시장 자유화, 경쟁 촉진을 통한 인프라접근성 확대, 온라인상 신뢰 구축, 소비자편익 극대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선언함

- 글로벌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선언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언
 - 전자상거래 인증 선언
 - 전자상거래의 과세원칙 및 과세체계 조건 선언
- 지난 10년간 OECD는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1980년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글로벌 네트워크 실질 이행방안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관회의’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해 왔음
- 지난 10년간 오타와 장관회의 결과물의 대부분은 아직도 달성해야 할 유용한 목표이며, 최근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IP 기반의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로 융합됨에 따라 기존 규제정책 재정비가 필요
 - 더불어 인터넷이 이미 경제활동의 중요한 인프라로 변모함에 따라 새로운 OECD 장관회의 개최 필요
-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 유치는 캐나다, 포르투갈,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치 경쟁을 벌였으며, 2006년 10월 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 ICCP) 51차 정례총회에서 OECD 장관회의의 지역적 안배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나라 서울로 개최지 선정됨

2. 주요 논의 사항

□ 인터넷을 활용한 혁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 논의

-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 IT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유통의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과 IT에 관한 국제 동향을 소개함
- 수많은 객체들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적 문제의 해결의 사례를 공유하였고 인

터넷의 협동모델이 주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논의

- 인터넷 상의 혁신 및 창의성 증진은 문화적 테두리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가치 변화의 효과를 논의

□ 융합의 혜택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논의

- 융합의 정의는 기술, 정책, 사회적 함의를 포괄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된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을 의미함
- 온라인상의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면서도 시장 경쟁 정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논의
- 차세대 네트워크의 개발 및 확충은 인터넷 경제의 기본과제로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정비 그리고 시골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간 투자의 유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
- 네트워크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이용자 간의 이익관계를 균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과 같은 제도의 정비를 추진함

□ 국제공조

- 인터넷상의 침해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 정부 간 협력 체계를 세우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기술교육, 서비스의 호환 등을 위해서 선진국과의 협력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온라인상의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행방안 논의

□ 개도국의 인터넷 경제의 확충

-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 기술교육, 서비스의 호환 등을 위해서 선진국과의 협력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인터넷이 대중적 미디어로서 시민 중심의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며,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기회의 확대에 대한 논의

□ 인터넷 거버넌스

- 인터넷 주소고갈의 현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각 국가의 입장의 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논의
- 인터넷 기술의 호환 및 융합을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 중심의 분권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

II. 개막회의

1. 사회적 네트워킹 및 사용자 제작 콘텐츠

□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와 ‘프로슈머(prosumer)’의 등장

- 인터넷으로 인해 미디어 영역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함께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와 ‘프로슈머(prosumer)’가 탄생하게 되었음
 - 이들은 기존의 매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미디어 콘텐츠를 검색, 소비 및 생산함

□ 인터넷을 통한 직접 참여

-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
 - 사람들이 정치문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됨
 - 인터넷으로 인해 권력이 일반시민에게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 역시 변하고 있음

2.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보호

□ IT를 환경에 접목한 ‘Green IT’

- I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회 전반의 에너지 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IT 분야의 기여방

안의 하나로 ‘Green IT’가 추진되고 있음

□ ‘Green IT’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 친환경 제품의 순 영향(net impact)을 가시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활동이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및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동기를 부여함
 -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유통 및 구매를 증진함

□ ‘Green IT’와 관련한 국제 동향

- 현재 여러 국가가 ‘Green IT’의 개념을 채택,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중임
 - 최근 일본은 ‘Green IT Initiative’ 전략을 발표, 덴마크는 ‘Green IT Action Plan’을 각각 발표하였으며, 많은 나라들이 IT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Green IT’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참가자들은 이번 장관회의가 ‘Green IT’를 더욱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인함

3. IPv4의 재활용과 IPv6 장려

□ 고갈되는 인터넷 주소 자원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 모색

- 정부와 기업은 IPv4에서 IPv6로 이전을 촉진하여 3년 내에 고갈될 인터넷 주소 자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직접적이고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유럽집행위원회는 2010년까지 유럽 인터넷 사용자 중 25%는 IPv6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제적 목표를 설정, 공공 서비스와 유력 웹사이트

트의 IPv6 이전을 앞당기도록 장려하였음

- 나아가 유럽집행위원회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국제표준 도메인명(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도입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터넷 활용을 위한 기회 제공을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음

4. 인터넷 아키텍처 및 3차원 인터넷 프로젝트

□ 새로운 인터넷 아키텍처 솔루션 개발

- 모바일 이용률과 인터넷 연결 객체와 이 객체를 구동시키는 애플리케이션 증가로 인터넷 인프라에 한층 효율적인 새로운 아키텍처 솔루션 개발이 시급한 문제임
 - 현재의 인터넷은 초당 100메가바이트 데이터 전송률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성, 라우팅, 보안 및 신뢰가 당면과제임을 강조함
- 이와 관련하여 비비안 레딩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은 “미래의 인터넷”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기업이 지구촌에 선보일 혁신 잠재력을 그려내는 차원에서 2013년까지 3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임을 언급하면서 지구촌의 모든 파트너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5. 국제 공조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격차 해소 및 정부 간 공조의 중요성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존재하는 정보통신 격차는 무선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모바일 통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문제를 효

과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 은행이나 상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현격하게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사용자들은 무선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모바일 뱅킹을 통해 현금자동인출기나 은행 지점 부족 문제의 해소
- 한편, 정보격차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서 정부 간 공조가 필수적임

○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제공조가 필요함

-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장벽을 허물고 규제 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 간 투자가 촉진되고 서비스의 호환이 증진될 전망

□ 인터넷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의 해결 필요

○ 광대역과 이동성으로 인해 인터넷의 잠재력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잠재력은 사라지거나 위협받을 수 있음

-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저작권 침해, 기타 악의적인 활동들이 인터넷 환경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
- 2007년 봄 에스토니아 네트워크에 대한 대규모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전송 중단(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교란되고, 에스토니아 로컬 네트워크가 지구촌 인터넷망으로부터 고립된 것을 계기로 유럽의 각국은 네트워크 공격이 국가경제와 사회구조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인식하게 됨

○ 모든 국가가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구촌이 인터넷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가 간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분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정책 및 보안 관련 협력의 틀에서 대처할 필요 있음
- 따라서 인터넷의 미래 및 인터넷으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필수적임

Ⅲ. 라운드 테이블

1. 경제성과 및 사회복지 향상

- 인터넷 경제는 미래의 경제 및 사회적 인프라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
 - 정부, 교육, 보건, 도로, 항구 및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통신이 핵심적 기술로서 사용될 것임
 - 정보통신기술정책은 공공정책 분야인 노동, 재정, 금융 등과도 연계성을 지니게 됨
 - 벨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e-banking, e-health, e-voting 등을 실현하고 있으며, 인터넷 인프라의 무한한 적용가능성을 소개함
 - 인터넷 기술을 통한 전자정부의 구현
 - 인터넷을 이용한 대 국민 서비스의 향상
 -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과 정부의 간격이 줄어들고 정부가 좀 더 국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 대중적 매체로서의 인터넷
 - 일반시민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며 사회 및 경제적 참여 기회 등을 획득하게 됨
 -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매체로서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은 시민 중심이라는 원칙을 상기
 - 아프리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Digital Solitary Fund'를 마련하여 기반을 확충하고 있음

□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인터넷

- 사회적 문제 및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 사회적 문제 및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과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ICT를 통해서 지구의 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지구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20%가 교통으로부터 발생되고 있으며, ICT는 교통수단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음
 - 일본은 자국의 환경보호 노력을 소개함
- 범세계적인 문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의 정책 관행을 살피고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로 전환에 관련된 주요 정책

- 인터넷 경제를 위한 브로드밴드의 확충은 가장 기본적인 과제임
 - VoIP 및 IPTV 등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
 - 인터넷을 국토의 도서, 시골, 산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 정책은 근본적인 방안
 - 특히 아프리카는 문맹률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활발한 투자 및 경쟁이 존재하는 네트워크 시장
 -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대한 서비스의 향상
 - 인터넷이 지향하는 시장은 독점 혹은 과점이 아닌 경쟁적 시장이며, 경쟁적 네트워크 시장을 기반으로 서비스 가격의 합리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 소비자 권익 증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

- 정부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
 -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비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함
 -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짧기 때문에 기술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사용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함
 - 정부는 독점적 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문제의 공공성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

- 중남미의 정보통신 발달 현황 소개
 - 1995년 이후 남미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전체 성장의 20% 설명
 -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인터넷 서비스인 IPTV, VoIP 등에 과감하게 투자를 함
 - 현재 무선 보급률이 약 24%이며, 특히 광섬유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짐
 - 민간의 역할이 주도적이며, 정부의 지원 정책도 병행

- 기타
 - 인터넷 접근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
 - 프라이버시 및 보안 침해라는 인터넷의 해악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함

2. 융합의 혜택

□ 융합의 정의

- 융합의 성격
 - 융합이란 단순히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통합 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비

로한 기기 및 서비스들 간 통합의 현상

- 모든 신기술에 대해서 개방적이며 이러한 기술들 간의 정책적인 융합 혹은 통합 노력을 비롯하여 기술적 혁명이 아닌 사회적 포괄(social inclusion)을 의미
- 교육적 측면에서 융합이란 글로벌한 지식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

○ 융합과 인터넷의 발달

- 융합과 관련된 어떤 요소가 인터넷의 발달을 가져왔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 인터넷 발달의 측면에서 융합이란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의미함

□ 융합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기존의 기술적 및 제도적으로 독립적이었던 네트워크를 서로 호환하며 통합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적절한 배합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함

○ 융합의 네트워크에서 모든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네트워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access)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기 정책적 방향 설정
-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수입 모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

○ 융합 환경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규제 및 모든 관련 제도는 투명해야 하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시행해야 함
- 콘텐츠를 어떤 네트워크의 인프라가 제공하는가에 대한 중요성 논의

- IPv4 주소 자원 고갈의 문제
 - 3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
 - IPv6로의 전환 시에 기존의 IPv4와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
 - 한편, IPv6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IPv6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IPv4와 IPv6의 공존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IPv6로의 자연스러운 전환 필요
 - 무엇보다도 IPv4 주소고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맞추어 분명한 대안을 수립할 수 있음

□ 회원국의 융합 환경을 소개

- 그리스: 인터넷 발달 소개
 - 서울선언문은 규제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터넷 발달의 지침으로 활용할 것임
 - 2008~2013년 전자 통신 신기술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FTTH 투자 등을 비롯해서 정보통신의 다방면에서의 투자를 포함하고 있음
 - 2004년 브로드밴드 보급률 1%에서 출발하였고 최근 급상승으로 2007년 10% 수준이며 약 30억 유로를 투자하여서 200만 가구에 브로드밴드 지원 계획
 - 융합의 일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스페인: 정책 발전 과정 소개
 - 스페인 인구 25%인 농촌에 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
 - 스페인의 학교 중 92%에 보급하였고 약 500만 명의 전자서명자 확보

- 이집트: 융합의 혜택을 인식 및 추진배경
 - OECD 회원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호소하고 규제적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를 소개
 - 이집트의 경우 디지털 및 브로드밴드 환경에서의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급선무로 인식
 - DSL 및 모바일 확충이 진척되고 있음

- 멕시코: 디지털 융합의 진전을 소개
 - 인터넷 보급률이 저조하지만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농촌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확충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5년 안에 공립학교의 85% 디지털 망 연결을 목표로 하며, 교육 및 의료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정보통신 부문 투자를 계획함

- 통상정책의 중요성
 - 향후 10년 안에 통상정책은 인터넷의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국가 간 교역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현실적으로 인터넷 관련 통제가 통상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측

3. 창의성 증진

□ 창의성에 관한 의견

- 창의성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
 - 창의성은 혁신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의 커다란 테두리에서 발생함

- 창의성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행위이며, 도덕적인 측면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서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

- 창의성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좀 더 구체적이고도 유일한 환경에서 발생됨

□ ICT 및 인터넷에 기반을 둔 창의적 연구와 혁신

- ICT 및 인터넷의 중요성
 - ICT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과 배포를 용이하게 되었고, 특히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임
 -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객체들의 협업을 유도하며, 협업을 통해서 작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모질라’(Mozilla) 프로젝트는 인터넷 협업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무수한 자원봉사자가 Firefox 발전에 참여하고 있음
- ICT의 접근성 및 지불 능력 확보
 - 네트워크의 접근을 비롯하여 콘텐츠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ICT 이용에 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
 - 공공기관이 보조금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대중에게 콘텐츠를 값싸게 제공해야 함
- ICT 활용을 통해서 민족, 언어 및 종교의 다양성 유지에 기여
 - 개인이 속한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요소가 창출
- ICT를 통해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
 - 특히 민간 부문과 연계하여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
 -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경우 210개의 다국적 ICT 기업 및 660개의 아일랜드

- 드 기업이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 환경의 보호는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정보통신기술이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함
 - 정보통신산업이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요구됨
 - 유럽의 북해 국가들은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을 실제로 줄인 경험을 소개함
 - 또한,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하고 ICT를 활용하여 제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적 영향을 줄임
 - 아일랜드의 경우 전기 및 에너지 저장 기술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통신사업자의 스팸을 줄여서 에너지 낭비를 감하는 효과를 설명함
- 정부는 창의라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인터넷이 개방적 플랫폼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또한, 정부는 친환경 기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기업의 혁신 모델을 유도함
- 한국의 Daum 소개
 - Daum은 한메일 및 카페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로 성장한 사례로서 웹에서 객체들의 협동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탐구적 선례를 만들었음
 - 글로벌 뉴스는 모든 사람이 기자가 되어서 실제 정보를 전 세계 지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되며, 하루에 65,000명이 약 3,000개의 콘텐츠를 제공함

○ 기 타

- ICT는 인구 문제의 해결에도 이바지하고,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부문에 여성 인력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함

4. 신뢰의 구축

□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

- 인터넷은 개방성, 익명성, 글로벌성(global reach), 그리고 유비쿼터스 속성을 가지고 있음
 - 인터넷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터넷이 벽촌 주민부터 대규모의 글로벌 기업까지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 인터넷 보급 수준이 각기 다른 나라 대표, 인터넷 기술 전문가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으로 인터넷이 사고나 유해환경에 취약하고,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그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 스팸, 프라이버시, 악성 소프트웨어, 디지털 신원관리, 소비자 보호 등과 같은 인터넷의 위험요소들이 점점 심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음
-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시키고, 인터넷의 악의적 이용 및 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됨
 - 지속적으로 정보 보안 문화에 대한 콘텐츠와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OECD 이사회 권고안에서 촉구된 바와 같이 핵심정보인프라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함
- 인터넷 경제의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통한 인터넷상의 신뢰 구축 필요성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함

- 인터넷으로 인한 혜택을 모든 국가가 누리듯이 그 어느 국가도 인터넷의 신뢰 보장에 관한 도전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 공조

- 인터넷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스팸, 악성소프트웨어,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함
 - OECD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 Union, ITU)에서도 인터넷의 신뢰성과 관련된 국제 공조에 강력한 지지가 있었음
 - 마드 드 바우어-부키치오 유럽평의회(COE) 사무차장은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체결과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함
- 프라이버시와 보안문제는 단순한 기술 범죄가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뢰 일체가 포함된 복잡한 사안이며, 한 국가만으로는 대처가 어려우므로 국가 간의 공조가 필요함
 - 전 세계적인 기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하며, 각 나라는 자국법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버려야함
 -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Network)나 런던액션플랜(London Action Plan)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 또한 유용하며, 각국의 신뢰 구축과 사이버 테러, 국가 안보, 개인의 자유보장 사례를 공유하는 데 동의함

□ 소비자 권리 강화 및 보안문화 구축을 통한 인터넷 신뢰사회 구축

-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정보, 정치,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오늘날, 사용자가 인터넷을 신뢰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각국 정부들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추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임
-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함
 - 소비자는 선택, 다양성, 기술 중립성, 기술로부터의 혜택, 상호운영성,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함
- 인터넷은 현대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을 시민사회로부터 단절하는 것과 같으며, 이에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및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가 유연하게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특히 저작권 집행 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나 강력한 감시는 지양해야 함
 - 노인과 어린이의 인터넷 사용의 습득 및 용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개발하는 부문에서 현재 안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문맹퇴치에 대한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처음 설계 단계부터 각각의 개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 인터넷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보안 문화 구축

- 보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적 요소를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보안 문화를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은 물론이고 전에는 협력하지 않았던 이 해당사자들과의 협력도 필요함

5. 글로벌 인터넷 경제

□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인터넷은 생산의 방식을 바꿨으며, 인터넷 사용 방식이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모델이 탄생하고 있음
 -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분(동영상, 음악을 전 세계로 유통)의 사이버 시장이 구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가의 인터넷 광고와 거래를 통해서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문형 마케팅이 가능케 되었음
- 인터넷이 경제에 가져다 준 3가지 주요 요소
 - 생산성 향상: 사람이 소통하고 엔터테인먼트를 누리는 방식이 바뀌고, 이것이 곧 국가의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인터넷이 지식을 얻는 등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음
 - 거버넌스: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와 시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투명성을 재고해야 하며, 이는 곧 전자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의미함
 - 글로벌 경제 구성: 글로벌 경제가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통신이 가치의 30% 이상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함

- 인터넷 경제는 개도국에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며 지식의 생산, 접근 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

- 과거와 비교할 때 지금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세계 도처에서 누구나 지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므로 '인터넷 자유(Internet Freedom)'라는 개념이 탄생함
 - 인터넷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적 함의를 가지며, 특히 개도국에서 정부정책의 방향, 국민들의 지적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OECD 국가들이 인터넷경제의 framework와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인터넷경제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기회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자유는 더욱 확대될 것임

- 전 세계 인터넷 사용인구가 14억을 넘어섰으며, 현재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는 약 80%에 달하고 있음
 - 최근 유선보다 무선 인터넷 접근 방법을 통해 B to B 혹은 B to C의 기술 경험을 하고 있으며, 여러 유형의 인터넷 환경으로 인터넷 경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광대역통신망은 오늘날 전기, 수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빈개도국(UN designated LDCs 49개국) 경우에 2000년 37만 명에 불과했던 인터넷사용자가 최근에는 1,100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휴대전화의 다층적인 역할의 변화로 인해 통신망이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최빈개도국이 개발도상국가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개발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이나 그 밖의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힘을 쏟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임
 - 참가자들은 이제 정보격차는 극복할 수 있으며, 광대역격차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와 공공분야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협력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뤄지면 ICT 분야의 발전은 더욱 희망적임

□ 글로벌 인터넷 경제를 위한 국제 협력

- 정책과 규제는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접속과 연결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임
- 온라인을 통한 지식 확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도 가능해지고 있으나 두 가지 걸림돌이 존재
 - 첫 번째는 ‘문맹’으로 키보드에 있는 문자조차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나 능력배양 사업, 신규 서비스가 늘어나야 함
 - 두 번째는 ‘미디어 문맹’으로 정보사회의 기본 여건, 인프라 교육, 지식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함
- 이러한 걸림돌 제거를 위해 정부, 민간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국내외적으로 협력을 해야 함
 - 정부는 기업이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정책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함
 - 공공행정 부문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인터넷 콘텐츠 활용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함
- 미래의 사용자들을 위한 Single Global Internet으로 개도국들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 국제 경제 증진에 힘을 써야할 시기임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은 정부, 기술전문가, 시민단체로 확장된 인터넷의 신뢰를 보장해야 함

IV. 전문가 패널

1. 정부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 정부와 민간의 협력

- 정부가 규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나서거나 반대로 민간에 완전히 일임하는 것 모두 옳바르지 않음
- 인터넷 발전에 강한 규제자는 필요치 않으나 그렇다고 무한정의 자유방임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자의 역할은 필요함
- 위협요인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민간과 협력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분권화를 통한 혁신도모

- 인터넷은 계속 진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한번 정해도 곧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큼
- 물리적 공간에 기초한 기존의 규제 틀은 가상공간에 대해 맞지 않으며, 기술 진보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진정한 혁신을 도모하는 길은 규제기관이 기회와 참여, 개방, 투명성을 유지하여 분권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

망중립성 관련 논의

- 망중립성 관련, 개방과 공정을 표방하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4가지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미래변화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예단하여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것임

2. 정보보호에 관한 입장

개인정보보호 확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경제계, 산업계, 대학 및 연구계의 대표들과 보다 많은 파트너십을 가져야 함
- 경제발전에 필요한 신뢰와 투명성이 창출되고 준수될 때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짐

임베디드센서네트워크(Embedded Sensor Network)와 정보보호

- 임베디드센서네트워크는 환경자원이나 인간행동의 관측 등에 활용가치가 높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이슈가 있어 정보수집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이나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기술적 사용이 필요함
- 센서네트워크 기술의 가능성과 함께 책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정보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 인터넷은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갈등해결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임

- 네트워크는 문제발생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및 관리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단지 유사시 대비하는 2중 투자만이 아니라 서비스 속성에도 부합하는 망, 접근이 용이한 망,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망을 통해 보안성과 신뢰성 제고

3.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입장

저개발국에 대한 기회제공

- 인터넷 대역폭의 경우 미국, 유럽, 일부 아시아국의 순으로 점하고 있으나 여타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요원한 실정임
- 저개발국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ISP 망 구축 비용을 저렴하게 부과해야 함

V. 이해관계자 포럼

1. 비즈니스

□ 비즈니스 포럼의 전체 구성

-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참석한 200여 명이 기업의 시각에서 인터넷 경제와 미래의 잠재력을 논의
- 총 6개 세션으로 구성
 - 인터넷경제의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비전
 - ICT혁신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
 - 컨버전스와 정보사회: 네트워크접속, 플랫폼, 기기
 - 창의와 혁신: 경제와 사회를 위한 창의적 비즈니스 솔루션
 - 신뢰 Trust2.0: 온라인신용의 구현을 위한 비즈니스적 접근
 - 인터넷미래의 비전 구현: 정책목표 설정
- 특히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3C(융합, 창의, 신뢰)를 주요 논의의 틀로 삼음
- ‘비전 성명(vision statement)’을 작성하여 장관회의에 제출

□ 비전 성명

- 비전 성명에서는 다음의 7가지 조건을 제시함
 - 투명한 법적 규제 틀을 확립하여 경쟁시장을 보장함
 - 동기를 부여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 법적체제를 확립하여 창의성과 혁신

을 보장함

- 초고속 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 등에 대한 투자를 증진함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의 안전한 흐름을 보장함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
- 관련 능력배양 교육 및 훈련을 받은 노동인력을 육성함
-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함

□ 비즈니스 포럼의 합의사항

- OECD는 인터넷 경제의 기본연구 및 분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정책에 지침을 제시해야 함
 -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정책이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10년간 기술의 발전을 통해 참여를 증진하고 신뢰를 제고하여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함
- 각 국 정부가 ‘비전 성명(vision statement)’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함

2. 인터넷 기술전문가

□ 인터넷 기술 집단의 소개

- 17개 기관이 인터넷 환경을 형성하고 있음
 - 더욱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분권적인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터넷 기술의 융합도 정부 주도의 중앙집

권적이 아닌 중립적이고 분권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인터넷의 운영 원리: 협업(Collaboration)

- 인터넷이 초기부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모델은 바로 협업임
 - 인터넷이 작동하는 이유도 인터넷 아키텍처에 존재하는 무수한 객체들의 협업에 의해서 유지 발전됨
 - 단대단(end-to-end) 원리는 인터넷의 모든 것으로 혁신을 가능하게 한 원리
- 밑으로부터의 협동적 모델(Bottom-up model)
 - 전통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동하는 모델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개입 없이 인터넷상의 객체들의 판단과 주도하에 의해서 협업이 진행됨
 - 그러나 정부는 기후, 보건 등의 공공 분야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관리하고 그들과 협조할 수 있어야 함

□ 인터넷 아키텍처

- Access layer는 무수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네트워크는 상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각각의 네트워크의 운영과 관리의 설정도 상이하며 그 구성에 있어서 국경, 기업, 정부, 지역적 차이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음
- IP layer는 소유 혹은 개방적인 형태로 존재함
- Application layer는 소비자 혹은 사용자와 접하고 있는 층이며 애플리케이션 제공은 ISP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

- 네트워크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알고 있어야 하며 Application layer는 새로운 시장의 진입이 매일 발생되고 있음
- 차세대 네트워크는 접근과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연결하는데 이바지하였으나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인터넷의 활용

- 물리학자가 동일한 실험을 대규모로 실시하며 날씨를 시뮬레이션하여 기상 관측 및 예측을 가능하게 하며 원격 치료 및 진료
 - 미국의 FCC는 Rural Health Care Pilot Program에 4억 달러를 지원
- 인터넷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인터넷의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Research Education Networks(RENs)를 지원하고 이것이 네트워크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또한 OECD는 회원국 정부가 이러한 공공부문에 개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를 희망
 - 저렴한 인터넷 관련 기기 혹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터페이스를 개발

□ 인터넷 거버넌스

- IANA의 IPv4 주소 고갈 문제는 현실적이며 Comcast는 2010~2011년 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그러나 고갈에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로 전 세계적인 주소에 대한 수요, 새로운 기술의 도입, RIRs 운영 방식 등에 따라서 고갈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장기적으로 IPv6로의 전환이 최고의 방법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표준화 기관, RIRs, 장비 업체들과의 연계적 협조가 필수적임
- 인터넷에서의 신뢰 문제
 - 신뢰는 인터넷의 발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지역적인 구도로 보안 문제에 대한 협력적 체계가 형성되고 있음
 - 신뢰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며 아키텍처 전문가에게 있어서 신뢰는 네트워크 'redundancy' 혹은 'resilience'를 의미하는 안정적 네트워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 스팸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이며 기술적인 예방법이 꾸준하게 발달해 왔지만 국가 간의 법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려움이 상당수 존재
 - OECD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적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지침이 국가 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촉구함
- 이해관계자들의 조율
 -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NOGs(Network Operations Groups)는 정보교환 및 기술교육을 통해서 ISP의 지역 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RIRs 회의와도 같이 조직되어 있음

3. 시민사회 및 노동계

□ 시민사회(Civil Society) 포럼

- 15개국의 단체와 참가자들이 참석한 본 시민사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 전략 및 관행, 인터넷 경제에서의 노조 역할, 포용적인 인터넷 경제 구축 및 Web 2.0 활용 사례 등에 관한 이슈를 논의함

- 시민사회는 인터넷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기술의 확산만으로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없으며 소비자와 노동자의 복지가 얼마나 증진될 수 있는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함
- 시민 사회는 특히 1948년 UN 인권선언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된 지 60년이 지난 오늘날의 지구촌의 정치와 인권에 대한 시각으로 인터넷의 미래에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함
- 시민사회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포용성, 문화다양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OECD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자, OECD가 시민사회자문위원회(가칭 Civil Society Advisory Committee to OECD)를 만들어 시민사회의 참여를 공식화 해줄 것을 당부함

□ 노동계 포럼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OECD, TUAC)는 “인터넷은 새로운 것의 생산, 확산의 촉진제”라고 강조함
 - 제품의 전체수명주기(full cycle)를 고려하여 IT 기기를 생산하고 인프라를 개발하여 IT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거래를 가능케 하였음
 - 앞으로는 좀 더 환경 친화적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IT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근로기준 등과 같은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을 고려해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또한 노동계는 기술 주도적 결정, 즉 기술결정주의로는 인터넷 경제가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변화란 창의적 파괴가 아니기 때문에 당면 과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동인의 역할을 하는 정책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밝힘

- 기술의 빠른 변화가 각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노동 시장의 변화와 노동계 대표자의 지혜를 모아 정책 개발에 주력
- 노동시장 등 모든 영역에서의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인터넷을 통해 그 영역이 더욱 확충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우, 보호주의가 아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노동인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이 필요함
 - e-폐기물 등을 제조단계부터 관리하고, 전 지구촌의 친환경적인 IT환경을 위해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제안함

VI. 평가 및 전망

1. 종합 평가

□ 장관회의 의의

- 인터넷 경제가 지닌 사회적·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국가사회의 인식을 권위적으로 표출
- 인터넷을 위시한 정보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 및 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출발

□ 장관회의 성공적 개최

- 지난 2년 여 동안 OECD 본부 및 회원국 정부가 준비해온 2008년 서울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는 성공리에 개최되었음
 - 장관회의 개최를 이끌어낸 한국 측 대표단의 부단한 노고와 함께 OECD 본부의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2. 정책 평가 및 전망

□ 정책적 결과 및 향후 방향성 진단

-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는 그 동안 정부의 규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디어로서 인식되었는데 이슈의 발견과 이해를 통해서 정부의 역할의 구체성이 드러남
 - 신뢰의 구축과 관련해서 정부의 물적 지원이 필요하며 각 국가의 합의 도

- 출이 필요한 만큼 정부 주도의 정책 형성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음
- 한편, 국제 공조에서 누가 얼마를 더 부담해야하는가 혹은 침해적 행위에 대한 문화적 이해의 차이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

□ 인터넷 콘텐츠 관련 정책 관련 회원국 간 입장 차이 논의 부족

- 라운드테이블의 운영방식이 토론이기 보다는 발표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논의가 불충분
- 인터넷 경제의 고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의 필요성이 더해 갈 것으로 예상
- 특히 국가적인 이익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만큼 국내 정책의 조율의 어려움도 예상

□ 혁신에 대한 유익한 정보의 교류

-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세계 모든 지역으로부터 온 전문가 혹은 담당자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유용한 정보의 공유
- 인터넷 활용을 통한 혁신의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환경, 소비자 권익, 고용, 비즈니스 창업, 교육, 보건, 교통, 정치 및 문화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했음
- 발표 전문가들의 발표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지속적인 민간 교류 및 정부 간 연계를 확보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음

□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 및 정책적 한계

- 개발도상국의 참여도는 매우 높았으며, 인터넷 경제의 비전과 도전에 대한

- 관심은 진정한 글로벌 경제를 지향하는 본 장관회의의 목적에 부합
- 남미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축에 우선적인 관심을 표방함
- 인터넷을 통한 정치 및 사회적 통합을 기대하고 있고 특히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고 선전하는 도구로서 인터넷 발전을 희망함

○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한계

- 관련 정책과 제도의 정비에 관한 경험의 공유는 비교적 부족하였으며 북미와 유럽의 선진 정책과의 제도적 격차가 심해서 정책의 목표와 과정을 여과 없이 벤치마킹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임
- 콘텐츠 산업이 취약하며 인터넷을 통한 혁신의 범위가 정치와 문화적 분야에 국한되는 경향
- 개발도상국 간의 벤치마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진국의 경험 사례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

□ 인터넷 거버넌스 확대 논의 필요성

○ IPv4 주소 자원 고갈 문제에만 국한된 논의

- ENUM과 같은 인터넷 전화 시스템, 도메인 네임 관리, 인터넷 콘텐츠 규제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의 비중을 늘려가야 함
-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책의 결정이 인터넷의 활용과 혜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이슈간의 유기적인 이해를 도모해야 함
-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개입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와의 협조 방안을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